

도·교육청 '2017년 결산검사' 돌입

도의회 결산검사위원회, 도 5조7924억원·교육청 3조1926억원 예산 집행 건전성·적절성·효율성 검사

전북도의회가 29일 전북도와 교육청을 대상으로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돌입한다.

도의회 결산검사위원회(대표위원 허남주)는 이날부터 4월17일까지 20일 동안 지난해 전북도 5조7,924억원, 도교육청 3조

1,926억원의 예산이 애초 목적대로 쓰였는지와 선심성·남비성 예산은 없었는지 등을 살핀다.

결산검사위원은 허남주·최영규·강용구 의원 등 도의원 3명과 전직공무원 5명, 세무사 2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 위원들은 지난해 도와 도교육청이 집행한 세입·세출예산과 기금,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 계속비·명시이월비·사고이월비 등 6개 분야에 걸쳐 예산집행 건전성과 적절성, 효율성 등을 집중 검사한다.

결산검사 대상기관은 도와 도교육청 본청은 물론 직속기관과 사업소도 포함한다. 한편, 결산검사위원회가 작성한 결산검사 의견서는 오는 9월 열리는 제356회 정례회에 제출돼 승인을 받게 된다. /김진성 기자

장제원 "경찰 사랑합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28일 자신의 논평으로 경찰 일부에서 집단 항의에 나선 것과 관련해 "거친 논평으로 마음을 다친 일선 경찰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며 고개를 숙였다.

장 수석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하의 논평이 많이 거칠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경찰 일부는 27일 '정권의 사냥개', '미친개' 등 원색적 표현으로 자신의 조직을 향해 비난 논평을 낸 장 수석대변인에 대해 집단 항의에 나서기도 했다.

그는 이어 "저는 경찰을 사랑한다. 의정 생활 중 4년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서 경찰과 함께했다"면서 "경찰의 인권과 권익향상 그리고 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자세를 낮췄다.

장 수석대변인은 "앞으로도 경찰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경찰을 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한 노력은 한층 더 가열차게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앞으로 제1야당의 수석대변인으로서 표현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다만 그는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을 비롯한 일부 경찰을 향한 비난은 멈추지 않았다.

장 수석대변인은 "다시 한 번 밝히지만, 제 논평은 경찰 전체를 대상으로 한 논평이 아니라, 울산경찰청장을 비롯한 일부 정치경찰을 명시한 논평"이라며 "권력을 추종하는 정치경찰은 반드시 추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27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과 관련해 "한국당 대변인 발언이 좀 강했던 건 사실"이라며 거듭 수습에 나섰다. /뉴시스



베트남-UAE 순방 마치고 베트남과 UAE 순방 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8일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장하성 정책실장과 인사하고 있다.

靑 "북중 정상회담, 남북-북미 회담에 긍정적"

"특별열차 출발 때부터 주시... 한·중간 긴밀히 협의"

청와대는 2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북중 정상회담이 앞으로 있을 남북, 북미 탈레이 정상회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중 정상회담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북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한번도 비핵화가 선대의 유산'이라는 김 위원장의 발언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정상간 대화 내용이 앞으로 있을 남북회담, 북미회담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방

북 때도 "비핵화의 목표는 선대(先代)의 유산이었다"며 "북미대화의 의제로 비핵화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이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이러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함에 따라 향후 있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보장과 관련된 협상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지난 2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와 북한이 원하는 체제보장 등을 동시에 이룰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양재초 국무위원 방한 때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 따른 정전 협정 체결 방안도 함께 협의될 가능성도 있는가'라는 질문에 "지금 그 정도까지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사실을 청와대는 언제 사전 통보를 받았는 가 리는 질문엔 "김 위원장의 방중 자체는 특별열차가 출발할 때부터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며 "한중 고위관계자 간에 긴밀한 협의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의용 안보실장이 시 주석을 찾았을 때 김정은과의 북중 정상회담 가능성이 거론됐었나'라는 질문에는 "그 때는 (여기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광주형 일자리 모델 군산 도입 정책 토론회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따른 군산지역의 지원 방안 논의가 숨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지금과 같은 임시방편 지원책이 아닌 새로운 기업유치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주목받고 있다.

28일 김관영 국회의원·(사)군산국가산단경영자협의회·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본부·군산대 산학협력단이 주관하고 전북도와 군산시, 호원대, 군장대와 군산발전협의회가 후원하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 군산 도입을 통한 군산경제 활성화 및 기업유치 전략 모색 정책 토론회'가 군산대에서 열렸다.

'광주형 일자리'는 그동안 적지 않은 경영 리스크로써 기업들의 투자결정·확대를 저해해온 고임금·노사분규 등의 문제를 사전 협의 완료한 상태에서 투자결정을 확정하도록 함으로써 투자결정에 대한 부담 완화와 향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책임경영을 가능도록 하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 도입된 일자리정착 모델이다.

이날 정책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여한 공인노무사 이병훈씨는 광주형 일자리의 진행경과는 물론 독일 폭스바겐의 '이우토5000' 등 해외사례를 소개하며 "전북·군산 지역의 열악한 지방 재정과 위기에 봉착한 산업생태계를 고려할 때 유의미한 전략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관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경제구성원들이 대립적 관계가 아닌 신뢰와 대화로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동지로 연대해야 할 것"이라며 "군산경제의 회복을 넘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군산을 만드는 위기를 기회로 삼는 첫 단추 전략을 만들자"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우원식 "靑 개헌안·당론 일치... 野 개헌안 내놔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개헌과 관련해 "야당이 분권 쟁점으로 국무총리의 국회 선출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동판지 같은 소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는 국회가 입법권에 이어 행정권까지 장악하는 것이다. 국민은 중앙과 지방 균형을 요구한 것이지 제왕적 국회의 탄생을 원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가 아닌 국민을 위한 권력 분산에 협조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은 분권이라는 핵심가치를 지키면서도 야당 제안에 열린 자세로 임할테니 야당이 80여일간 소모전, 정쟁 말고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간 개헌안 미련을 위한 첫 회동이 어제 진행됐다"며 "(여당이) 수도 없이 요구한 협상 테이블이 개문발차한 것으로 첫 회동 성과를 논할 수 있지만 두 야당이 자신의 입장 없이 여전히 대통령 발의안을 비난하는 데 귀중한 시간을 허비한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 개헌안과 별도의 여당안을 내려고 생트집 하면서 개헌 성사를 위한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했다"며 "앞다시피 대통령이 제출한 발의안은 민주당이 수차례 개헌 의원총회를 열어 채택한 당론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이 각당 개헌안을 확정하지 않고 국회 합의가 지연됐기 때문에 이를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이 정부여당 입장을 조문화해 국회에 제출한 것"이라며 "여당안을 냈으니 이제 야당의 개헌안을 테이블 위에 올릴 때다"고 요구했다. /뉴시스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